

도내 정치권 · 2개 지자체, 새만금 신공항 판결에 “깊은 유감” “균형발전 전략 역행... 적기 추진을”

민주 도당 “전북 발전 핵심 과제... 국토부 즉시 항소, 모든 당력 집중하겠다”

전주시 “지역 모든 역량과 연대 정상추진 노력” · 군산시 “공항 필요성 강조”

도내 정치권과 전주시, 군산시가 11일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의 원고 승소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이원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항의 정상 추진을 위해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당은 이번 법원 판결이 “전북

도민의 오랜 염원을 무참히 짓밟고 균형발전이라는 국가 생존 전략에 역행하는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새만금 국제공항 건립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전북 발전의 과제이자, 국가균형발전을 앞당기고 국가 미래 전략 거점을 마련하는 중차대한 사업”임을 강조하며, 반드시 적기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국토교통부가 이번 판결에 즉시 항소하고 사업을 지속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향후 국토교통부 및 전북특별자치도와 적극 협력하여 하루라도 빨리 새만금 국제공항이 건립되도록 당의 모든 역량을 모아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내 2개 지자체에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전주시는 “이번 행정소송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며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지역의 모든 역량과 연대에 새만금공항의 정상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시는 “새만금 국제공항은 단순 항공 인프라를 넘어 새만금 트라이포트 완성의 핵심축으로 이번 판결이 매우 아쉽다며 앞으로 국토교통부·전북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새만금 국제공항의 필요성을 강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민주 도당, 이재명정부 출범 100일 맞아

“회복 · 정상화의 시간”

“대국민 소통 · 32조원 역대급 추경 · 정상 외교 등

전 영역 불확실성 해소 · 민생경제 반전 기틀 마련”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이원택)은 11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민주주의 · 민생경제 · 미래성장을 위한 회복과 정상화의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김술지 공동수석대변인(사진)은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100일 기자회견이 “날라진 대한민국, 새로운 대한민국”을 상징했다고 밝혔다.

도당은 국민주권 정부의 지난 100일이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과 국정 원칙이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설명했다.

주요 성과로는 △활발한 대국민 소통 △정의를 위한 수사 △32조원 역대급 민생 추경 △미일 순방과 정상 외교 등을 꼽으며, 이를 통해 정치·경제·외교·안보 전 영역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민생 경제 반전의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은 남은 임기 1,752일 동안 이러한 회복과 정상화를 바탕으로 매일 성장하고 도약하여 균형 발전에 이르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다짐하며, 민주회복과 경제 성장, 그리고 전북 발전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 ‘장학속 관장 물의’ 도민께 사과 “인사 검증 강화하겠다”

전북특별자치도 산하 재단법인 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하 진흥원, 원장 이현웅)이 최근 불거진 서울장학속 관장 임명 관련 물의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인사 검증 시스템 보완을 약속했다.

물의를 빚었던 한 모 서울장학속 관장은 지난 10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11일 오전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찾은 이현웅 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은 “이번 서울장학속 관장 임명과 관련하여 물의를 빚게 된 점에 대해 도민에게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원장은 임명 절차를 기존 방식대로 진행했음에도 “도덕적인 부분에 대한 검증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



저도 안타깝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한 모 관장이 “본인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보고 싶어서 왔는데, 일이 이렇게 본인의 기대와는 다르게 흘러가고 도민들의 우려가 커서 자발적으로 사직을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서울장학속 관장의

“도덕적 검증 부족 안타까워 재발 방지 만전 기하겠다”

임명 과정에서 불거진 ‘도덕성’ 문제로 시작했다.

이현웅 원장은 이번 물의를 계기로 인사 검증 시스템을 전면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개인 정보 보호 문제와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본인 동의를 받아 음주 경력, 성범죄 경력 등 민감 정보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변호사 자문 등을 거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도덕성을 검증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 모 관장의 사직에 따라 서울장학속 관장 인선 절차도 즉각 재개된다.

이현웅 원장은 “이번 채용에서 후순위가 이미 발표 되어있는 상태”라며, 해당 후 순위를 대상으로 신원 조회 및 최종 인사위원회를 통한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 역시 법적인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한편, 이 원장은 서울장학속이 민간 위탁 시설로 운영되면서 직원들이 느끼는 소속감 부족과 근로여건상 불이익 문제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만호 기자

농어촌 기본소득 국가 · 지자체 ‘투트랙’ 재정 지원

민주 윤준병 의원, 법안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11일 농어촌 주민의 생활안정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농어촌기본소득 제도화’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어촌에 거주하며 농어업을 영위하는 농어민에게 연 200만원 이상의 기본소득 지



급 △기본직불금 및 지자체 지원액을 고려한 산정 △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운영하는 ‘투트랙’ 재정 지원 방식 마련 등이다. 국가 운영 시 50% 이상을 직접 지급하고, 지자체 운영 시 국가가 20% 이상을 인센티브로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효과적인 사업 시행을 위한 시범사업 근거도 명시했다.

/이만호 기자 · 정읍=김태환 기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순창서”

오은미 도의원, 국회에 지원 법안 통과 촉구

인구소멸 위기 등 강조하며 최적지 내세워

진보당 소속 오은미 전북특별자치도 의원(순창)이 11일 오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국가 시범사업을 순창군에서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연 360만원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도농 간 소득 격차 해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오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계획에서 월 15만원(연 180만원)이 산출된 것에 대해 “도농 간 소득 격차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계산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2023년 기준 농가소득이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의 60.5% 수준에 불과하며, 1인 농가 포함 시 농가소득이 약 800만원이나 낮아진다는 현실을 지적하며, 정부의 지원책으로는 도농 간 격차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신정훈·용혜인 의원이 발의한 농어촌 기본소득 연 360만원 지급 법안의 국회 통과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순창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의 최적지임을 강조하며 다각적인 실효 노력을 펼쳤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0일 국회를 방문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박희승, 전종덕 예결위원들을 만나 순창군 시범선정을 강력히 촉구했으며, 최영일 순창군수 역시 농식품부 담당국장과 만나 시범 사업 유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오 의원은 순창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실시 이유에 대해 순창군은 행정안전부 인구 감소 지수가 87.5로 상위권이며, 전북 지역 인구 감소 7개 군 중에서도 최하위 수준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통한 지역 활력 촉진이 가장 시급한 지역이다.

또한 산업 연계 가능성과 관련하여 K-Food의 본산이자 명품 관광지로써, 기본소득을 장류·관광산업과 연계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 정주 인구 유입,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 본래 목적



오은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11일 오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국가 시범 사업을 순창군에서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을 빠르게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준비된 재정과 관련해서는 2024년 순세계 잉여금 289억 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미 자체적으로 농촌 기본소득을 통한 지역 활력 촉진이 가장 시급한 지역이다.

또한 산업 연계 가능성과 관련하여 K-Food의 본산이자 명품 관광지로써, 기본소득을 장류·관광산업과 연계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 정주 인구 유입,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 본래 목적

을 빠르게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준비된 재정과 관련해서는 2024년 순세계 잉여금 289억 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미 자체적으로 농촌 기본소득을 통한 지역 활력 촉진이 가장 시급한 지역이다.

또한 산업 연계 가능성과 관련하여 K-Food의 본산이자 명품 관광지로써, 기본소득을 장류·관광산업과 연계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 정주 인구 유입,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 본래 목적

포스코이앤씨는 인력확충, 안전기술 강화, 투자확대 등을 기반으로 무재해 달성 의지를 다지는 안전실천 결의대회를 가졌다.



11일 포스코이앤씨에 따르면 경상남도 안시 안전실천 결의대회. (사진=포스코이앤씨 제공)

김해 신문지구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송치영 사장 등 임직원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실천 결의문을 발표하는 등 안전확보를 다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안전이 회사 경쟁력의 초석임을 공감하며 ‘나 함께 행동하는 안전’을 원칙으로 재해 없는 현장 만들기 위해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현장안전 책임자는 매일 작업에 앞서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모든 근로자에게 작업중지권을 보장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안전 임원 정기적 현장 안전점검 실시 △일일평균 200명 본사직원 현장 안전관리 파견 △안전보조원 100명 추가 배치 △AI·IoT 기반 지능형 CCTV, 지체차 전방 모니터링 장비 도입 △이동식 CCTV 2배(533대) 이상 확충 등

인력·기술·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안전교육, 현장소장 토론회, 소통간담회 등을 지속하고 있다.

송치영 사장은 각 본부에 무재해 기를 직접 전달하며 “지난 40여일 동안 묵묵히 함께해 준 임직원과 협력사에 감사드린다.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현장 실행을 강화해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했다.

협력사 진척건설 이상해 대표는 “어떤 성과도 안전보다 앞설 수 없다. 작업중지권 보장과 10대 안전 철칙 준수로 무재해 현장을 만들겠다”고 했다.

한편 포스코이앤씨는 안전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지난달 5일 ‘안전 비상 경영체계 D-150일’을 가동·운영 중에 있다.

/권희성 기자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 내년 예산 확보 추진 실적 청취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손중열·사진)가 제274회 임시회에서 집행부로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에 대해 청취중으로, 손중열 위원장 등 위원들은 지역 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세심한 정책 배려를 주문했다.

손중열 위원장은 노인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이 할 수 없는 부분은 지역 사회 협업체가 사회복지의 중간 거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을 입안에 달라고 요청하고,

오창숙 부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관련해 진행 내용의 변화나 발전이 없음을 지적하며 지역민의 유출이 없도록 관심과 소통을 주문했다.

김갑수 의원은 키포드 이용자 중 청소년들이 많음을 지적하며 이용실태 분석과 안전에 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오동환 의원은 대외 교류 활성화를 위해 자매결연 도시를 상대로 남원 한달살기 프로그램을 진행을 제안했다.

강인식 의원은 공공의대 법률안 통과가 연내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하고, 이미선 의원은 청년 주거사업 관련해 관의 청년 유입에 앞서, 지역 내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는 모집기준과 규제완화로 정주조건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도의회 농복환위, 옥정호 녹조현장 점검 나서

현장의정활동 일한



보고 부서별 주요 기능 소개 시설 현장 견학 등을 진행했다.

농업복지환경위원회는 이번 현지의 정활동을 바탕으로 △옥정호 수질 관리 정책 점검 △보건환경 대응체계 예산 및 조직 진단 △도민 환경복지 향상을 위한 입법·예산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도의회 교육위원회, 전주교육지원청 등 방문

현장의정활동 일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진형석)는 제421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10일 오후 전주교육지원청과 전주학생교육문화관을 방문하는 현지의정활동을 진행했다.

의원들은 채선영 교육장과 김형대 교육문화관장의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다양한 질문을 던져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진형석 위원장(전주2)은 교육청-지자체-대학 간 협력·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이 요체인 교육발전특구 사업과 관련하여 “특구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지역별 사업들의 내용이 비슷하고

그 지역만의 특색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하고, 그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의원들은 두 기관의 사무실, 열람실 및 자료실, 서고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직원 및 주민들의 애로사항 해소와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줄 것을 한 목소리로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